

## 2000년 이후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 추이

**수행과제명** ...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략  
: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현상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김 영 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idimail.re.kr

### 요 약

여성 자영업자(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는 2010년 현재 243만명으로 여성 취업자의 1/4(25.9%)에 해당하나, 이제까지 여성 자영업자 대책은 전무했으므로 지난 10년간의 추이와 특성변화를 분석하여 여성 자영업자 정책설계를 제안함

### 1. 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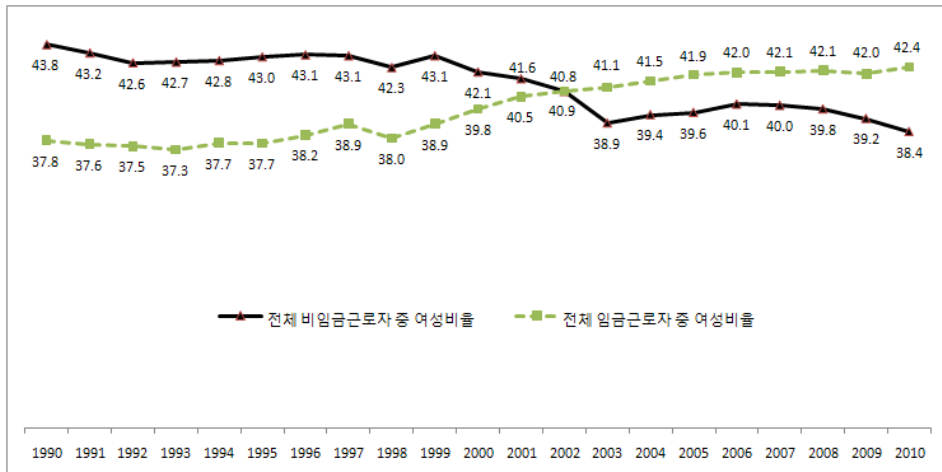
- 우리 사회는 2000년 이후 고령화·저출산 추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음. 아울러 여성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 및 비임금 여성근로자의 감소 현상을 들 수 있음. 자영업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증가하였다가 2003년 내수 침체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이

- 후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추이는 여성이 견인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자영업자의 감소 추이에 초점을 맞춰 시계열 변화의 규모를 측정하고 여성자영업자의 제반 특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유출입 이행분석 및 자영업 선택요인 추정을 통해 자영업부문의 동태변화를 설명한 후 여성 자영업자 정책설계를 시도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 자영업부문의 감소는 여성이 주도

- 2000년 이후 자영업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임. 특히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3년과 2009년에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여성의 자영업 진입·탈출이 남성보다 경기변동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한 후 증가세를 이어나가 2010년 현재 42.4%에 이름. 반면 비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90년대에 42~43%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 38.9%를 기록함. 2006년까지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처럼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추이가 뚜렷함



[그림 1] 비농가 비임금·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1990~2010년)

- 자영업자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자의 감소가 이를 주도함.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여성 임금근로자는 3.80%라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나, 가족종사자와 자영자는 각각 연평균 -0.9%, -3.17%의 비율로 감소함.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추이가 뚜렷한데 이는 가족형 자영업의 쇠퇴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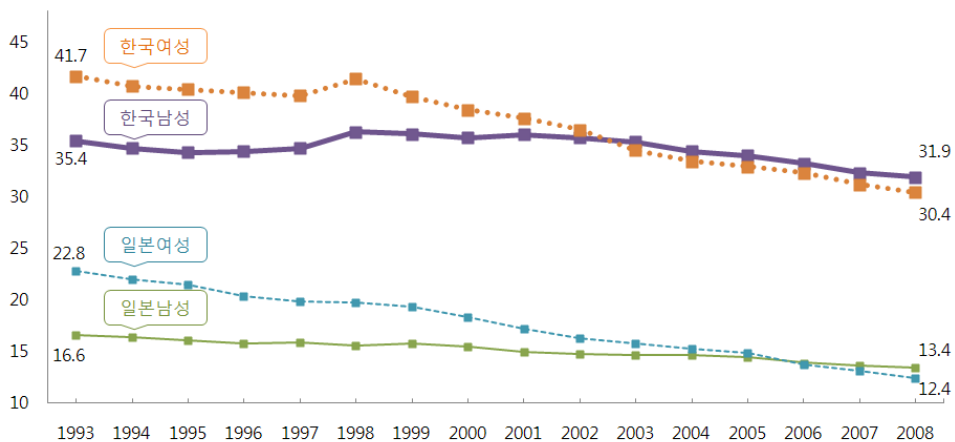
〈표 1〉 자영업자의 성별 종사상지위별 증감율(2000~2010년)

(단위: 천명, %)

종사상지위	남자				여자			
	2000년	2010년	증감	증감율(연평균)	2000년	2010년	증감	증감율(연평균)
임금근로자	7,644	9,486	1,842	24.10 (2.41)	5,049	6,970	1,921	38.04 (3.80)
고용주	1,190	1,121	-69	-5.83 (-0.58)	262	310	48	18.49 (1.85)
자영자	2,093	2,108	16	0.74 (0.07)	1,171	1,066	-105	-8.96 (-0.90)
가족종사자	129	130	1	0.48 (0.05)	1,045	714	-331	-31.66 (-3.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마이크로데이터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인데 지난 10년 (1998~2008년)의 기간 동안 자영업자 비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특히 한국은 여성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인데, 지난 10년간 여성자영업자의 감소추이가 남성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OECD 국가들에서의 자영업 감소추이와 우리나라의 감소추이를 감안할 때 이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권이면서 경제발전이 한단계 앞선 일본과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추이를 비교해 보았음. [그림 2]가 보여주듯이 양 국가 모두 그리고 남녀 자영업자 모두의 비중이 지난 1990년대 이후 감소함. 그런데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 감소가 뚜렷한 추이가 두 나라에서 모두 나타남.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여성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이 1993년에 41.7%에 이르렀는데, 1998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08년에는 30.4%를 보임. 남성의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이 동 기간중 35.4%에서 31.9%로 감소함



자료: OECD Factbook 2008, 2009, 2010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추이(1993~2008년)

## □ 여성자영업자는 중고령 및 저학력층이 중심이지만, 분화가 일어나는 중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사업장 특성을 분석하였음. 남녀 공히 자영자>고용주>임금근로자의 순으로 4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50세 이상의 비율이 2010년에 여성 자영자중 45.1%, 무급가족종사자중 41.0%에 이르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됨
- 대졸이상의 비율이 남녀 공히 고용주>임금근로자>자영자>가족종사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2010년의 경우 여성취업자중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대졸이상의 비율이 40%를 넘지만, 자영자와 가족종사자 집단에서는 각각 28.1%, 16.8%임. 반면 중졸이하의 학력자 비율이 각각 30%를 넘음
- 상당수의 저학력자는 시대효과(cohort effect)를 반영하여 고연령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고연령·저학력층이 상대적으로 자영자 집단 내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여성 자영업자 대책 설계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짐. 이처럼 여성 자영자의 저학력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착화가 완화되는 추세임. 여성 자영자 내부에서도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 여성자영업자의 업종 및 직종 다변화 추이 탐지

- 여성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여성자영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전통적으로 여성 자영업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0년도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에 분포하는 비율과 비슷했음. 이 추세는 남성자영자에서도 나타나지만 여성만큼 두

드러지지 않는다는 점. 이는 여성자영업주 집단내의 직종 다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결과로 보임

## □ 여성자영업자의 영세성

- 2010년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비임금근로자들의 사업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업장 위치,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금의 조달방법과 창업자금의 규모, 국민연금 가입현황 등에서 여성 자영업주의 영세성이 확인됨
- 사업장 위치를 보면, 고용주는 거의 대부분이 특정 건물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여성 57.5%, 남성 55.5% 만이 지정된 사업장이 있었음. 또한 남성 자영업자의 26.6%는 자동차나 트럭 등 운송수단이 주 사업장이고, 여성 자영업자의 23.0%는 본인의 집이 주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집에서 과외나 소규모 놀이방을 운영하는 등 가사노동과 병행이 가능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비농업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위치(2010년 8월)

(단위: 천명(%))

사업장위치	여성			남성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사업장	312 (98.1)	593 (57.5)	640 (91.4)	994 (90.5)	1,171 (55.5)	109 (83.1)
자기 집	3 (0.8)	238 (23.0)	16 (2.2)	3 (0.3)	83 (3.9)	10 (7.9)
남의 집	1 (0.2)	79 (7.7)	0 (0.1)	1 (0.1)	28 (1.3)	0 (0.0)
거리	1 (0.5)	59 (5.8)	20 (2.8)	7 (0.6)	101 (4.8)	3 (2.3)
야외 작업현장	2 (0.5)	53 (5.1)	18 (2.6)	78 (7.1)	161 (7.6)	6 (4.6)
운송수단	0 (0.0)	5 (0.5)	6 (0.9)	15 (1.3)	561 (26.6)	3 (2.2)
기타	0 (0.0)	5 (0.5)	0 (0.0)	0 (0.0)	4 (0.2)	0 (0.0)
계	318 (100)	1,031 (100)	700 (100)	1,097 (100)	2,110 (100)	132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 부가조사 원자료

- 사업자 등록 유무를 알아보면, 남녀 공히 고용주의 90% 이상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률은 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자영업자의 77.5%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반면, 여성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였음

〈표 3〉 비농업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유무(2010년 8월)

(단위: 천명(%))

사업체 형태	여성			남성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자 등록 있음	304 (95.4)	508 (49.3)	612 (87.5)	1,036 (94.4)	1,636 (77.5)	114 (86.8)
사업자 등록 없음	15 (4.6)	523 (50.7)	88 (12.5)	61 (5.6)	475 (22.5)	17 (13.2)
계	318 (100)	1,031 (100)	700 (100)	1,097 (100)	2,110 (100)	132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 부가조사 원자료

- 사업자금 조달방법을 보면 남성은 고용주나 자영업자 모두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목돈으로 창업한 비중이 약 70% 정도로 가장 높았음. 여성도 비슷했으나 본인 및 가족 소유 목돈으로 창업한 비중이 자영업자의 경우 50.7%로, 다른 그룹에 비해 약간 낮았음. 남성 고용주 및 자영업자 모두 제도권 금융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목돈 다음으로 주요 자금조달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고용주: 15.2%, 자영업: 12.1%), 여성 자영업자의 33.5%는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승계 또는 무자본 창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본인의 집을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되는 부분임

〈표 4〉 비농업 자영업주의 사업자금 조달방법(2010년 8월)

(단위: 천명(%))

사업자금 조달방법	여성		남성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 (적금, 퇴직금, 명퇴금 등)	230 (72.1)	522 (50.7)	755 (68.8)	1,431 (67.8)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	17 (5.3)	28 (2.7)	59 (5.4)	60 (2.8)
친지 또는 동업자 이외 타인에게 빌려서 마련	12 (3.9)	50 (4.8)	50 (4.5)	121 (5.7)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48 (15.1)	72 (6.9)	166 (15.2)	256 (12.1)
사채, 대부회사 등	5 (1.4)	7 (0.7)	5 (0.5)	15 (0.7)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 등	1 (0.4)	3 (0.3)	3 (0.3)	8 (0.4)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었음 (사업승계, 무자본창업 등)	5 (1.7)	345 (33.5)	55 (5.0)	211 (10.0)
기타	0 (0.0)	4 (0.4)	4 (0.4)	9 (0.4)
합계	318 (100)	1,031 (100)	1,097 (100)	2,110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 부가조사 원자료

- 여성 자영자의 영세성은 창업자금 규모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여성 자영자의 51.7%가 500만원 미만의 창업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세 자영업자임을 알 수 있음

〈표 5〉 비농업 자영업주의 창업자금 규모(2010년 8월)

(단위: 천명(%))

창업자금 규모	여성		남성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5백만원 미만	21 (6.6)	533 (51.7)	107 (9.7)	463 (22.0)
5백만원~2천만원 미만	67 (21.0)	246 (23.9)	202 (18.4)	629 (29.8)
2천만원~5천만원 미만	100 (31.5)	177 (17.2)	299 (27.3)	600 (28.4)
5천만원~1억원 미만	73 (22.9)	52 (5.1)	272 (24.8)	323 (15.3)
1억~3억원 미만	49 (15.4)	16 (1.6)	177 (16.1)	85 (4.0)



창업자금 규모	여성		남성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3억원 이상	8 (2.6)	6 (0.6)	41 (3.8)	10 (0.5)
합계	318 (100)	1,031 (100)	1,097 (100)	2,110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 부가조사 원자료

- 남성의 경우 고용주의 80.2%, 자영자의 60.4%가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인 반면 여성은 고용주의 68.8%, 자영자의 34.7%만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여성 자영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60%에 육박함

〈표 6〉 비농업 자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현황(2010년 8월)

(단위: 천명(%))

가입현황	여성		남성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직장가입자	109 (34.2)	89 (8.7)	492 (44.8)	232 (11.0)
지역가입자	110 (34.6)	268 (26.0)	388 (35.4)	1,043 (49.4)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 연금 수급권자	9 (2.8)	57 (5.5)	45 (4.1)	227 (10.8)
미가입	90 (28.4)	617 (59.9)	173 (15.8)	608 (28.8)
합계	318 (100)	1,031 (100)	1,097 (100)	2,110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 부가조사 원자료

## □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특성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간자료를 패널화하여 비농가 자영업부문으로의 유입과 유출의 규모를 추정하고, 유출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여성자영업자의 이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비경제활동상태로 나가거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자영업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 반면 임금근로자로 나가거나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사례는 남성보다 적고, 이동하는 경우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 무급가족종사자는 성별로 판이

- 남성 가족종사자가 2010년에 약 13만명 수준인데 이중 미혼인 비율이 2010년에 44.6%로서(10년간 52.5%→44.6%), 2.7%인 여성 가족종사자와(3.4%→2.7%) 극명한 대비를 이룸. 또한 남성 가족종사자중 20대 연령층 비중이 높고, 학력수준도 남성 자영자보다 높게 나타남. 이것은 여성 가족종사자의 경우 협업배우자 비율이 높고 남성은 부모의 자영업을 돕는 형태임을 암시함
- 실제로 여성 가족종사자는 93%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협업배우자로 결합하고 있음. 남성 가족종사자의 경우 45.2%가 가구주의 자녀로서 부모의 사업을 도움(가구주의 배우자인 비율은 31.4%)

### 3. 정책제언

-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은 2005년도에 마련된 “영세자영업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 문제를 과잉진입에 있다고 보고 그 대책으로 전문자격증제 및 신고제 도입 등으로 진입제한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비판을 받았고,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채 흐지부지되었음. 이후 이렇다 할 자영업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본 분석결과는 다음의 정책방향을 시사하며 이로부터 총 5가지의 정책 제안을 마련함
  - ① 여성자영업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빈번한 노동 유출입에 착안하여 더 나은 상태로의 이행을 돕는 정책이 유효함
  - ② 여성자영업자의 영세성에 대응한 산업정책 및 근로복지정책이 필요함
  - ③ 여성자영업자 집단의 분화와 다양성에 대응한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됨

### 제안1)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산업정책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산업정책은 전무한 상태임. 이것은 자영업 부문이 생산성이 낮고 또 과잉이라는 인식 아래 암묵적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의 산업정책은 기존 자영업체의 수익 개선 및 생산성 제고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업종에 따라서는 자영업 부문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력을 부여하고, 완충역할을 하기도 함
- 덴마크의 HomeService Scheme과 같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함. HomeService Scheme은 산업정책을 통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은 개인서비스업에서 새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맞벌이·고령가구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여가를 늘리는 성과를 거뒀음. 이 계획은 1994~6년 동안 시범실시되었고,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1998년 3,500개 사업체가 10,000명의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했음. 새롭게 고용된 인력은 대부분은 기능수준이 낮거나 실업자였음. 여러 비판이 있지만, 실직자, 저기능 소지자, 자영자 등에게 새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되며, 노동부의 이전정책들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 이처럼 새 시장을 개척하는 자영업 지원 산업정책은 여전히 유효함

## 제안2)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여성자영업자는 유출입이 빈번한 집단임. 절반에 가깝게 노동시장 안과 밖으로 유출입을 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임시·일용근로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그렇다면 여성자영업자 대책은 여러 취업상태 및 종사상태간 이행을 원활히 하고, 나은 상태로 이행을 돕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주요 정책수단은 직업훈련 및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것임
- 이 때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연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임. 영세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직장경험이 거의 없으며, 적극적인 취업의지 부족과 임금근로자로의 자신감 결여로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하는 훈련과목이 없거나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 곤란 등의 이유로 훈련참여를 기피하기도 함.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 등 서비스업분야 종사자의 경우 근무여건이 상이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06년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즉 고용보험법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서는 소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러나 2010년 12월말 현재 가입자는 5,605명에 그치는 상황임. 가입이 저조한 것은 현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의 직능개발훈련에의 참가의향이 높지 않고 자영업자를 위한 특화된 과정의 부족도 이유가 될 듯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훈련을 내실화하여 직업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우선 2008년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예산(고용보험기금 제외)의 4.2%에 불과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훈련비를 확충하도록 함. 또한 월 5~11만원에 불과한 훈련수당을 현실화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생계유지와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하

고 선택가능한 훈련기관의 폭을 확대하도록 함. 특히 여성 자영업자의 인적자본 특성 및 일가정 양립 부담 등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됨

- 한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개혁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모델에 기초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사례관리를 통하여 구직자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민간 직업안정기관은 전문프로그램의 위탁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지향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새일센터와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필요함

### 제안3) 사회보장체계 내로 자영업자 통합

- 현재 자영업자의 영세성, 소득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체계 내로 통합되어야 할 우선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2010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8월 부가조사에 의하면 고용주의 76.2%, 자영업자의 49.8%가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분리하면, 남성은 고용주의 78.7%, 자영업자의 58.6%가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인 반면 여성은 고용주의 68.9%, 자영업자의 33.7%만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여성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거의 60%에 육박함. 고용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 전체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국민연금가입자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현재 납부유예자임. 1995년부터 지역가입자중 농어민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데, 영세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고용보험의 경우 당초에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1998년부터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개정안이 2009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계류중이었다가 드디어 2011년 6월 30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동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으로 자영업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폐업을 한 경우 소정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로써 영세자영업자의 폐업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로 자영업자 계정을 설치하고, 수지균형을 위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가입유도가 쉽지 않을 듯함. 제도도입 초기의 가입률 제고 및 기금 지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안4)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

- 정부의 모든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소상공인지원정책이 그러하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적용대상도 그러함. 그런데 본 분석에 여성자영업자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들 여성은 영세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의 특성과 하지 않는 이유 및 장애요인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는 별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제안5) 여성자영업자 전담부서 구축

- 2010년 현재 여성 고용주는 31만명, 자영자는 107만명, 가족종사자는 105만명으로 총 243만명에 이릅니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697만명이므로 여성 자영업자 수는 총취업자의 1/4(25.9%)에 해당하는 규모임. 그런데 여성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미미하며, 주관하는 부서도 없음
- 현재 자영업자 대책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일부 관련되어 있는 실정임. 그런데 본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여성자영업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 안팎으로 이동이 활발함. 따라서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엮을 수 있는 조정부서가 필요함. 그런데 이와 같은 범부처 사업에 대해서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프랑스의 ‘책임장관제’와 같이 해당부처들을 연합해 합동조직을 만들고 가장 전략적으로 적합한 부처의 장관을 총리가 책임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장관이 공통의 사회경제적 목적 아래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정책사업은 소상공인정책 및 노동정책의 각각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통합되어야 하는 지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임. 예컨대 전술한 사업주 등록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또는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이 제조업중심이므로 자금조달 등의 주요 정책수단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달하지 않는 지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 아울러 본고의 분석에서 여성자영업자들의 인적 자본, 가족관계, 사업운영 관련하여 내부 다양성이 매우 큰 집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여성 자영업자 집단별로 정책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라 하겠음

#### 4. 기대효과

- 2010년 현재 243만명에 이르는 여성 자영업자(여성취업자의 25.9%에 해당)의 정책집단화
- 여성 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지원정책 및 고용보험정책 등의 대상집단화
- 여성 자영업자 전담부서 마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중소기업청 소기업지원과  
**관계부처 :**